여야, 韓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놓고 强 대 强 대치

박찬대 "9인 체제 심판해야, 權 터무니없는 말장난" 양곡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엔 "韓 착각하면 안 돼" 권성동 "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" 주장

'12·3 내란 수괴'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 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 원내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 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와 관련, 신경전을 벌였

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"민주당은 국 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"이라며 "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 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"고 말했다.

특히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 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"(윤석열 대통령)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"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"터무니없는 주장"이라고 일축했다.

그는 "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 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.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, 따라서 국 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"이라며 "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"고 주장했다.

이어 박 원내대표는 "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"며 "민주당은 내란수괴 탄 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 을 기울일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"며 "한 권한대행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다. 한 총리 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"고비판했다.

그러면서 그는 "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 과 갈등만 유발할 뿐"이라며 "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 다"고촉구했다.

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"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"며 "(윤석열 대통령) 탄핵 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(한덕 수)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 다"고주장했다.

이어 권 원내대표는 "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 으로 행사할 수 있고, 그래야 한다"면서도 "행정 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 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"고 지적했다.

그는 또 "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 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"고 설

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"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한 박 원내대표는 "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



민주당 내란극복・국정안정특위 첫 회의

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·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발언하고

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 판한 바 있다"며 "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 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"이라고 지적했다.

권 원내대표는 "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가 누구 때문인가. 바로 민주당 때문"이라며 "자 신들이 탄핵한 장관, 방송통신위원장,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 느냐"라고 반문했다. /김진수기자 헌재 사무처장 "韓 권한대행,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"

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"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 하는게 가능하다"고 밝혔다.

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 원의 질의에 "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 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"고 답변했다.

박 의원이 '국회가 의결해 선출하는 경우는 형 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 하지 않으냐'는 취지로 묻자 김 사무처장은 "그렇 게 생각하고 있다"고 입장을 밝혔다. /김진수기자

> *색상 랜덤발송 *재고 소진시까지

산업부·중기부 장관 "비상계엄 동의 안 해"

김원이 '12·12 담화' 관련 질의에 공식 입장 밝혀 金 "국무위원 심의 없이 위헌·위법적 진행" 지적

'12·3 윤석열 내란 사건'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과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·중소벤처기 업부 장관 모두 "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" 는 입장을 밝혔다.

17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(목포, 국 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)에 따르면 김 의원이 최근 보낸 '12·12 윤석열 담화 문에 대한 장관의 입장'을 묻는 질의서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"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 지 않음"이라고 답변했다.

오영주 중기부 장관 역시 "비상계엄 상황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던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"며 "어려운 경제 상 황과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, 계엄 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"라고 회신했다.

비상계엄 관련 네 번째 담화인 '12·12 담화문' 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"대통령의 헌 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"라고 주장했으나, 우리 나라 산업계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총괄하 는 주무 부처의 장관은 모두 계엄에 동의하지 않 으며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우려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.

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던 오 영주 중기부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동선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"서울 사무실로 이동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. 특정 장소에서 단 체로대기하지 않았다"고 답했다.

앞서 오 장관은 "비상계엄과 관련한 계엄공고 문이나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을 한 바 없 으며 계엄공고문을 보지 못했다"고 답변한 바

김원이 의원은 "윤석열은 12·12 담화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반성은 커녕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 관했다"며 "비상계엄은 국무위원들의 제대로 된 심의나 동의 없이 위헌·위법적으로 진행됐음 이 명백히 드러났다"고 강조했다.

이어 김 의원은 "비상계엄 이후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, 외국인 방한 및 연말모임 취소가 잇 따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어려 움이 더욱 심각해졌다"며 "민주당은 민생 경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경제 부처 및 관련 단체와 적극 협력하며 앞장설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/김진수기자

※판매점에 따라 혜택은 다소 상이합니다

+

Panasonic 파나소닉 안마의자 SPECIAL WEEK `Happy*Helidays , 2024.12.01 ~ 2025.01.31 쓰시던 안마의자를 바꾸세요 최대 100만원 할인 0 GOOD DESIGN AWARD 2023 Happy Holidays 파나소닉 안마의자 SPECIAL WEEK 무선청소기 타사 안마의자 포함, 쓰시던 안마의자 교체 시,MAN1 최대 100만원, 모든 파나소닉 안마의자 할인가로 구매가능! 파나소닉 무선청소기 MC-A10 (249,000삼당)

'내란 특검·김여사 특검법' 정부 이송

새해 첫날이 거부권 시한

법제처는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'내란 일반 특검법'과 '김건희 여사 특검법'을 접수했다.

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
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 구권(거부권) 행사 시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2025년 1월1일이다.

'내란 일반특검'은 '12·3 비상계엄 사태'와 관 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 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 게 돼 있다.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.

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, 명 품 가방 수수,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 입, 20대 대선 부정선거,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 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 으로 규정했다.

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, 비교섭단체가 1명 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 명하도록 했다. /연합뉴스

